

보도일시

2025.5.27.(화) 배포 즉시

담당처

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<진짜 대한민국>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(단장 : 박범계)

김 후보, **측근 비리 원천이자 온상** ... ‘조작된 청렴’

주변 비리 만연한데 한 건도 없다며 허위사실공표 ...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

- 최측근 한 모 전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골프장 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 명목 4.4억 뇌물 수수해 징역 3년
- ‘측근 중 측근’ 손 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, 국민 혈세로 비자금 조성 ... 횡령 사건 처벌
- 신 모 전 경기도시공사 기조실장 광교신도시 개발 관련 뇌물 1.6억 원 받아 챙겨 징역 4년 6개월

□ 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.

여러 차례 측근 비리가 일어나 수사·유죄확정이 있었음에도 주변 비리와 관련해 “단 한 사람도 비리로 수사받거나 구속되거나 한 사람이 없다” 며 허위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이다.

□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 최측근인 한 모 전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이 골프장 업자로부터 인허가 편의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 뇌물을 수수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.

김 후보는 이와 관련 2009년 11월 한 도내 기관장 모임에 참석해 “도 기획관리실장이 재임 시절 골프장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” 면서 “경기도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분이 구속돼 면목이 없다” 고 말했다.

□ 김 후보 국회의원 재직시 보좌관, 경기도지사 재직시 비서실장을 지내며 ‘측근 중 측근’으로 평가받은 손 모 씨 또한 비리에 연루됐다.

특히 손 씨는 현재까지도 ‘김문수 사단’ 으로 회자 되고 있는 최측근 인사이다.

손 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재직하며 경기도가 지원한 보조금으로
비자금을 조성, 임의 사용한 횡령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.

특히 이 사건은 관련자 5명이 구속기소, 7명이 불구속 기소된 대형사건이다.

이른바 ‘경경련 보조금 횡령 비리 게이트’ 로 불리며 2017년 국회 국정감사 주요현안으로 불거졌다.

□ 광교신도시 택지개발공사와 관련해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기획조정실장도 뇌물을 받아 챙겼다.

□ 경기도시공사는 신도시 개발 목적 지방공기업으로 경기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됐다.

그간 타 지자체 사례에 비춰보면 도지사 측근 인사가 지속 임명됐다.

특히 김 후보는 이번 대선 유세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“대장동보다 10배는 큰 규모지만 개발 과정에서 아무런 비리도 수사도 없었다” 라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.

그러나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신 모 씨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
35억의 차익을 챙긴 감정평가사 등에게 1억 60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
6월 형을 선고받았다.

□ 김 후보가 2006년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임명한 권 모 경기도시공사 전 사장도 기획조정실장
신 모 씨에게 취임 직후부터 2008년까지 2790만 원을 상납 받고 인사상 혜택을 준 혐의로
불구속 기소됐다.

전임지사에 의해 임명된 오 모 전 사장 또한 같은 경위로 뇌물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
구속된 바 있다.

□ 이 모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를 당선시키기
위해 9억 6000만 원을 들여 GTX 홍보책자를 제작, 경기도내 20여 곳에 배포하는 등
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.

이 모 사장은 김 후보가 최초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, 당선인 인수위에 참여했고 경기도지사

정책특보를 지냈다.

아울러 이번 대선 출마 결심 직전에도 만났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되고 있다.

□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관리부장, 기획부장 등 3인은 지난 2010년 직원들로 하여금 김 후보에게 후원금을 기부토록 알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.

□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“측근 비리가 하나도 없었던 김 후보 주변이 정작 비리 온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”면서 “김 후보 주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김 후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측근들이 상당하다”고 강조했다.

박 단장은 이어 “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줄곧 ‘조작된 청렴’을 앞세우고 있었던 것”이라며 “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허위사실 공표를 중단하라”고 부연했다.

□ 한편 김 후보는 지난 16일 경북 경주 유세에서 “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한 번도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”고 발언했다.

앞서 지난 4월에는 한 방송에서도 “비리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거나 (중략) 한 사람이 없다”고 말했다.

법률지원단은 위와 같은 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와 같은 혐의로 권성동·주호영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또한 고발할 예정이다. <끝>